안경환의 법과 문화

왜 또, 누구를 위한 개헌 타령인가?

헌법은 '헌'법, 세법은 '새'법이라는 우스갯말이 있다. 법학도의 개그 속에 진실의 무게가 실려 있다. 법 중에도 속성상 자주 바뀌는 법이 있고, 그래서는 안 되는 법이 있다. 언제, 얼마의 세금을 내야하는지 세목과 세율이 정확하게 법으로 정해져 있어야만 한다. 이른바 '조세법률주의' 원칙이다.

재산과 수입과 물가에 변동이 생기면 내야할 세액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 정부사업의 규모가 커지면 세금도 더 걷어야 한다. 그러니 세법은 '새' 법일 수밖에 없다.

헌법은 정반대다. 헌법은 나라의 근간을 뒷받침하는 최고법이다. 국민주권, 자유, 평등, 복지… 민주헌법의 이념과 원칙이 하루아침에 쉽사리 달라질 수 없는 일이다. 다만 그 이념과 원칙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세부적 해석이 다를 수 있을 뿐이다. "옛 길에 새 걸음으로 발맞춰 가세!" 제헌절 노래 구절이 바로 이런 뜻이다. 헌법이 자주 바뀌는 나라는 그만큼 정치가 안정되지 않은 나라라고 할 수 있다.

1948년 제정된 이래 우리 헌법은 아홉 차례나 개정되었다. 한 때 '광주의 시인'이었던 황지우는 우리 헌정사를 '아홉 차례나 변태성욕자에 의해 능욕당한 가련한 여인'의 일생에 비유했다. 아홉 차례 개헌 중에 두 차례만 국민의 열망이 반영되었다. 1960년, 4·19 이후의 개헌과 1987년 시민항쟁으로 쟁취한 현행 헌법이 그렇게 볼 수 있다. 나머지는 전부 권력자의 야욕과 편의, 기망과 야합의 산물이었다.

전형적인 현대 민주헌법은 '기본권'과 '권력구조' 두 부분으로 구성된다. 그러나 양자는 대등한 관계가 아니다. 주(主)와 종(從), 목적과 수단의 관계다. 두 말 할 필요도 없이 기본권이 전자다. 그런데도 우리 헌정사의 모든 개헌 논의는 권력구조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대통령제인가 내각책임제인가, 대통령제의 경우에 직선인가 간선인가, 단임인가 중임을 허용할 것인가, 임기는 몇 년으로 할 것인가? 등 등.

개헌의 보다 근본적인 논의가 없다. 도대체 왜 헌법을 바꿀 생각을 하는가? 답은 한 가지. 현재의 헌법으로는 국민을 제대로 섬길 수 없기 때문이라야 한다. 다시 말하자면 현재의 권력구조로는 국민의 기본권을 효과적으로 보장할 수 없다는 인식이 개헌 논의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도 그 누구도 이런 논리를 제시하는 사람은 없다. 우리 헌법 아래서는 대통령과 국회만이 개헌을 발의할 수 있다. 국민은 스스로 개헌을 주도할 수 없다. 한 때는 헌법에 대한 찬반 논의 자체가 금지되었고 위반자는 사형을 각오해야 했다. '유신헌법' 아래 발동된 '긴급조치'의 참혹한 기억이 아직도 뇌리를 떠나지 않는다.

국회 일각에서 다시 개헌 논의가 일고 있다. 이번에는 새누리당의 이재오 의원이 주동자다. 그는 지난 정부의 '4대강 전도사'이자 개헌 논의를 막은 사람 중의 하나로 알려져 있다. 이명박 정부 초기에 당시 김형오 국회의장이 나름대로 개헌 연구팀을 가동할 때 청와대와 함께 제동을 건 장본인이라고 한다.

그런 그가 왜, 새삼스럽게 인제 와서 개헌 타령인가? 뒤늦게나마 국민의 입장에서 헌법의 문제점을 깨우친 것인가? 아니면 자신의 정치적 입지 때문인가? 개헌 논의는 5년 주기로 새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되풀이되는 현상이다. 그때마다 청와대는 시큰둥하고, 임기 후반에 가면 '차기 주자'들의 구체적 이해관계 때문에 사르라졌다.

헌법을 개정하려면 현직 5년 단임 대통령의 임기 초반에 전 국민의 공감대를 이끌어가면서 추진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정치수사, 탁상공론, 일시요설에 그치고 만다.

물론 현행 헌법은 완벽하지 않다. 1987년, 민주 시민항쟁의 산물이지만 불의의 구체제와 타협한 결과물이다. 대통령 임기 조항도 그렇다. 실로 수치스런 역사의 진애(塵挨)도 있다. 이를테면 '국가원로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고 '직전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한다는 조항 (제90조)이다. 이 조항을 제정할 당시의 '직전대통령'은 후일 광주의 살육을 주도한 내란죄의 수괴로 역사의 심판을 받았다.

개헌을 들먹거리는 정치인이 진정으로 국민을 섬길 충정에 불타 있으면 어떻게 하면 주권자인 국민을 모시고 보살필 것인가부터 고민해야 한다. 이를테면 정권의 교체에 따라 위상이 급격하게 부침하는 국가인권위원회를 헌법기구로 만들어 독립성을 보장한다든지.

무릇 인권의 최후 보루이어야 할 헌법재판소조차도 인권위는 헌법 전에 없기 때문에 자신의 권한을 주장할 자격조차 없다고 결정했으니 말이다. 이명박 정부 아래서 일어난 일이다. 국민의 헌법, 국민을 위한 개헌, 새삼스럽지만 다시 한 번 가슴에 새겨야 할 민주주의의 원론이다.

〈서울대 명예교수·전 국가인권위원장〉

종교칼럼

본향을 찾는 인생

이 원 재
광주무등교회 목사

누구에게나 고향은 있다. 물고기도 자기가 태어난 곳을 향해 목숨을 걸고 먼길을 여행하고, 그곳에서 산란한 뒤 생을 마감한다. 원숭이는 죽을 때 자기가 자란 큰 나무 밑에 죽음으로써 거름이 되어 은혜를 갚는다고 한다. 우리도 죽음 앞에 빚진 것이 있다면 어떤 모양으로든지 갚아야 하지 않겠는가. 사람에게는 '귀향본능'이 있다.

지난주 설 연휴 기간 약 2800만 명이 고향을 찾아 이동했다. 누군가 시켜서 한 것이 아니라 '귀향본능' 때문이다.

무엇 때문에 그 고생을 하면서까지 고향을 찾을까?

고향엔 내가 자란 정이 있고, 추억이 있다. 어린 시절 놀던 친구가 있다. 내가 뛰놀던 놀이터가 있고 나를 키워주신 부모님과 동네 어른들이 계신다. 아니 지금은 고인이 되어 안 계신다고 해도 어른들의 위엄이 있고 흔적들이 남아 있어 그것이 그리워 찾아가는 것이 아니겠는가.

서편에 해가 뉘엿뉘엿 질 때 공원의 벤치에 누워 지나온 세월을 돌아보며 눈물을 흘리는 노인들을 볼 수가 있다. 춥고 어두운데 왜 여기 누워 계시냐고 물으니 돌아갈 집이 없단다. 집이 없다 라기 보다는 집에 가봐야 여기 있는 것보다 못하다는 것일 것이다. 돌아갈 곳이 없다는 것은 서글픈 일이다. 인생은 누구나 한번은 죽는다. 죽은 후에 삶은 없는 것일까. 아니다. 누구나 저승이 있다고 한다. 다시 태어나면 이렇게 살지 않겠다고 하는 말엔 또 다른 세상이 있다는 것이 아니겠는가?

최고의 쉼은 죽음이다. 더 이상 약을 먹거나 병원에 갈일 없고, 자식걱정 나라 걱정할 것이 없다. 곤충이나 미물들도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준다. 한해살이가 끝나면 조용히 사라지지 않는가. 미련 없이. 그러나 반드시 흔적을 남긴다. 어떤 모양으로든지 자기의 씨를 뿌린다. 텃밭 무 잎이나 배추 잎을 보면 좁쌀처럼 빽빽하게 알을 실어놓았다. 땅을 파면 굼벵이가 나온다. 여기저기 생명의 실체들이 숨겨져 있다. 또 다음 세대가 시작되는 것이다.

하물며 인생에 다음 세대가 없겠는가? 인도환상. 또다시 무엇인가로 태어난다는 것이 불교의 '래세관'이다. 그렇다 반드시 내세가 있다. 그것을 저승이라고 하고 극락이라고도 한다.

어떤 곳에 부자가 살았다. 그 집 앞에서 구걸하는 거지도 살았다. 둘 다 죽었다. 그런데 부자로 살던 사람이 너무나 목이 타 죽을 지경이었다. 위를 보니 자기 집 앞에서 얻어먹던 거지가 아브라함의 품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지 않은가? 부자는 잘 아는 터라 거지에게 "얘야 내가 목이 타 죽게 되었으니 네 손가락에 물 한 방울만 찍어 내 혀를 적셔달라"고 애원을 한다. "그럴 수 없습니다. 당신과 나 사이에는 건널 수 없는 구릉이 있어 오지고 가지도 못합니다."

그러자 부자는 "그렇다면 우리 형제 다섯이 있으니 네가 가서 여기 오지 말라고 전해다오."라고 부탁했다. 거지는 "아닙니다. 내가 아니라도 형제들 주변에 여기 오지 않는 방법이 있다고 가르치고 있으니 그분들의 말을 들으면 됩니다."라고 말한다. 부자는 "아니다. 우리 형제는 완악하여서 절대로 그분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 그러니 네가 가서 말하면 들을 것이다."라고 또다시 부탁한다. 하지만 거지는 "아닙니다. 형제들 주변에서 말씀하신 그 분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내가 가서 말한다 해도 듣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그렇다. 인생의 끝은 죽음이 아니다. 반드시 또 다른 세상이 있다. 천국은 아무나 가지 못한다. 그러나 그분을 믿으면 간다.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시다. 역사는 그의 이야기다.

우리는 돌아간 본향이 있다 내가 온 곳이다. "돌아갈 내 고향 하늘나라"라는 찬송이 있다. 열심히 살자. 최선을 다하자. 오늘을 충실하게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해 준비하자.

미물도 겨울이 오면 겨우살이를 위해 준비하지 않는가. 곰은 겨울잠을 자기 위해 실컷 먹는다고 한다. 겨울잠을 자기에 충분한가를 시험하기 위해 높은 나무에서 떨어져 본단다. 떨어질 때 엉덩이가 아프면 아직 덜 준비가 되었다고 계속 먹고 다시 시험을 해본 뒤에 엉덩이가 아프지 않으면 겨울잠에 들어간다고 하니 미련한 동물이 아닌 것 같다.

사람이 곰만 못해서 되겠는가. 이번 귀향 귀성을 통해 인생을 한번 깊이 돌아보자. 내가 마지막 돌아갈 본향이 어디이며 돌아갈 준비가 되었는가를 말이다.

기고

공무원 연금적자 누구의 몫인가

채 길 성
광주시 공공노동조합연합 상임의장

우리나라의 공적 연금제도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연금제도와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을 가입대상으로 하는 특수직 영역 연금제도로 이루어져 있다.

1960년 공무원연금을 시작으로 1963년에 군인연금, 1975년에 사립학교 교직원연금(사학연금) 등 특수직연금제도가 먼저 실시됐으며, 연금제도는 1988년 10명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시작해 1999년부터 도시지역 자영업자에게까지 확대 적용되고 있다.

2005년 기금 보존제도 도입 이후 2009년 공무원연금발전협의회 개혁을 통해 기여율을 5.3%에서 7%로 올리고, 기여금 산정도 과세소득 전체로 포함시켰으며, 연금 산정의 기준도 퇴직 3년 동안 평균을 전체 재직기간으로, 연금급여도 76%에서 평균 62.7%, 지급 개시연령과 유족연금지급률을 조정한 상태다.

하지만, 최근 또다시 공무원연금에 대해 "만성 적자운영으로 국민의 세금으로 메워준다"며 왜곡된 내용을 일부 교수와 언론들이 의도적이고 일방적인 발언으로 공무원연금 문제를 사회적으로 부각시키고 있다. 주요 선진국들과 우리나라 정부의 공무원 연금 부담률만 비교해 봐도 공무원 연금의 진실이 얼마나 왜곡됐는 지를 짐작할 수 있다.

실제 우리나라 정부의 공무원연금 부담률은 13%로, 미국(27%)과 일본(26%), 독일(전액부담) 등 주요 선진국들과 비교하면 낮은 수치다. 특히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 간에 제도의 취지와 급여체계 등에서도 근본적 차이가 있음에도 단편적인 부분만을 끄집어내 마치 공무원이 큰 혜택을 보고 있는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큰 문제다.

우선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은 1년에 30일분 이상의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나 공무원은 퇴직금이 없으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도 제한되고 있다. 그래서 공무원연금은 보험의 원리보다는 공공보상의 원리와 직업공무원제의 확립에 따른 각종권리의 제한, 특히 정치활동 금지에 따른 공로보상의 원리가 포함돼 있다.

현재는 공무원 보수가 중견기업의 '87%~ 90%' 수준까지 올라왔지만, 최근까지 대기업 근로자의 50% 내외 박봉 속에서 노동3권의 제한 및 정치활동과 겸직 금지 등 숱한 고통을 참아왔다.

이와 같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의 제한은 공무원연금에 대한 특별한 가치부여의 근거가 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또한, 공무원 연금적자의 주원인이 정부의 방만한 연금 운영이라는 것도 문제다.

실제 정부는 공무원연금을 국내 증시안정 명목으로 주식에 투자하는 등 방만하게 운영해 기금 고갈의 원인을 제공했다.

여기에 IMF이후 공직사회의 대대적인 구조조정에 따라 연금 지출이 크게 늘어난 것도 공무원 연금에 대한 정부보전금 지원의 이유가 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1998년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통해 11만 명의 공무원을 퇴직하도록 했는데, 이들의 절반 이상이 일시금으로 연금을 받아가면서 연금 고갈의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

공무원연금은 공무원이 하나의 근로자라는 것에 추가해 사회적 기여를 전제로 만들어졌다. 실제 공무원은 재직 중 파면이나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연금액이 절반으로 제한되는 등 민간에는 없는 엄격한 규제를 받게 된다.

이 같은 논의를 빼고,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의 급여율을 수치로만 비교하는 것은 정당한 비교가 아니다. 기여율 또한 처음부터 다르다. 더욱이 공무원연금은 퇴직금과 노후연금, 산재보험 및 보수의 보상적 의미까지 합쳐진 개념을 담고 있다.

따라서 정부의 보전금액은 정부가 공무원의 고용주로서 근로자에 대해 일정한 재정적 부담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게 공무원노조의 입장이다.

만약 일반 기업에서 근로에 대한 보상으로 보수와 연금을 준다고 해놓고 나중에 재정이 어려워졌다고 해 적자 책임은 외면한 채 연금 당사자 간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삭감 등을 하려고 한다면 전 국민의 비난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런데 왜 공무원 연금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무차별적인 비난을 받아야 하는지 되묻고 싶다. 공무원 근로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 정부의 합리적인 연금 정책을 기대해 본다.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십시오.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0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84/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社 說

여수 기름유출 피해 보상 정부가 해결해야

6일 열린 여수 기름 유출 피해 대책회의에서 생계 터전을 잃은 어민들의 분노가 폭발했다고 한다. GS칼텍스 측은 방제작업에 들인 생계지원형 방제비에 대해서는 곧바로 지원하겠다고 밝혔지만 어민들은 GS칼텍스 측이 우선 보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해 앞으로 협상이 순탄치 않을 것임을 예고했다.

어민들은 특히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난 5일 열린 당정협의에서 "GS칼텍스가 1차 피해자고, 주민이 2차 피해자"라고 말한데다 이날 해수부 관계자가 "GS칼텍스도 피해자"라고 거론하자 강하게 반발했다. GS칼텍스 측도 피해자인 것은 사실이지만 늑장 신고와 유출량 축소로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해수부 측의 태도는 어민들을 두 번 죽이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어민들은 또 "보상 주체를 명문화하되, 주민에 대한 보상은 GS칼텍스가 책임지고 해달라"면서 이러한 요구가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오염 방제활동을 중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GS칼텍스 측은 보상이 아닌 생계형 방제비만 지원하겠다고 밝혀 정부가 권유한 'GS칼텍스가 1차 보상을 하고, 선사에 구상권 청구'가 사실상 물 건너가게 됐다.

어민들이 GS칼텍스에 선 보상을 요구하고 나선 것은 전례에 비추어 피해 보상이 장기화되는 데 있다. 시프린스호 기름 유출 사고의 경우 첫 번째 피해 보상까지 2년여가 소요되고, 보상률은 24.2%에 그쳤다. 2007년 태안 기름 유출사고는 현재까지도 보상 다툼만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정부는 어민들의 피해와 고통을 헤아려 보상 주체를 명확히 하고, 보상이 먼저 이뤄질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야 한다. 또 민주당이 6일 발의한 국가에서 기금을 조성해 먼저 피해 보상을 하고, 복원사업을 한 뒤 책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내용의 '환경책임법'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겉도는 광주 작은 도서관 이대로 놔둘건가

광주시가 전국 최초로 추진하고 있는 '작은 도서관' 지원 사업이 겉도는 것으로 드러났다. 규모 확장에만 치우치다 보니 부실 운영되고 있는 곳이 한 두 곳이 아니라는 것이다. 감독관청인 광주시가 지원만하고 지도 관리에는 신경을 쓰지 않았다는 반증이다.

본보가 최근 작은 도서관 43곳 중 40곳을 취재한 결과에 따르면 절반이 넘는 24곳이 계단을 올라가야만 이용할 수 있는 곳에 있었다고 한다. 조례에 규정된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의 접근에 장애가 없어야 한다'는 조항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또 일부 도서관의 경우 영하의 날씨에도 난방이 되지 않아 모포를 깔고 책을 읽어야 한다니 사실상 제역할을 못하고 있는 셈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용객이 있는데도 소등을 해 햇빛을 찾아 책을 읽어야 하는 웃지 못할 상황도 연출이 되고 있다. 심지어 점심시간이 지난 오후 1시가 넘어 찾아 갔는데도 문이 닫혀있는 곳도 많다고 하니 '주 5일 이상, 하루 8시간 개방'으로 규정된 운영시간이 무색할 정도다.

사서의 전문성도 문제가 있다고 한다. 대부분 자원봉사자가 사서를 맡으면서 책 정리가 잘 안 돼 제대로 꽂혀 있는 책이 없었으며, 열람 검색 또한 제대로 되지 않아 헛걸음하기 일쑤라는 것이다.

작은 도서관은 매년 10억 원이 넘는 예산이 지원되고 있다. 그런데도 시민들이 집 가까이서 책과 쉽게 접할 수 있다는 장점은 온데간데 없고, 되레 독서문화를 망치고 있다는 비판만 사고 있다. 이는 보여주기식 전시행정의 전형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광주시는 철저히 실태를 파악한 후 이용객 중심의 실질적인 개선책을 내놔야 한다. 방만한 곳은 과감히 정리하고, 제대로 운영되는 곳은 키우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부실하게 운영되는 곳이 없도록 관리감독부터 강화해야 한다.

無 等 鼓

전집(全集)의 추억

아마 처음 '내 책'이라는 소유욕을 불태웠던 시절은 초등학교 때였던 것 같다. 동서문화사의 '딱따구리 그레이트 북스' 100권을 손에 쥐면서부터다. 당시 50권짜리 계몽사판이 대세를 이뤘던 시절이라 어린 마음에 일단 권수면에서 우월감을 느꼈던 듯하다. 강소천의 '꿈을 찍는 사진관', '메어리 포핀즈' 같은 책이 떠오른다.

칼럼을 쓰며 인터넷을 찾아보니, 같은 추억을 갖고 있는 이들이 많아 반가웠다. 최근에 초판본이 중고사이트에서 60만원에 판매된 흔적도 있었다.

중학생 시절 방학 때면 대학생이던 사촌 오빠에게서 빌려온 한국단편문학 전집을 읽었던 기억도 새롭다. 대학생이 된 후에는 학교로 전집을 판매하는 이들이 다녀가곤했다. 김동인 등이 아닌, 한수산·최인호 등 현대 작가들의 작품을 만날 수 있는 삼성출판사 한국문학전집이 가장 인기였다.

세계 각 나라는 모두 걸출한 문학전집을 갖고 있다. 1935년 출판된 염가의 문고판을 바탕으로 1946년 '오디세이아'를 발간하며 시작된 영국의 펭귄 클래식은 아마도 가장 유명한 문학 전집 중 하나일 거다. 프랑스 갈리마르 출판사의 세계문학 시리즈도 유명하다. 국내 작가로는 유일하게 장흥 출신 이승우의 작품 '식물들의 사생활' 등이 포함된 시리즈다.

국내에도 세계문학전집이 붐이다. 전통의 민음사와 열린책들을 비롯해 문학동네, 창비 등 내로라하는 출판사들이 세계문학전집에 공을 들이고 있다.

최근 문학동네가 한국문학전집을 펴내기 시작했다. 1차분 스무권은 일단 작가들의 면모가 신선하다. 김승옥·박완서·황석영 등 중견 뿐 아니라 박민규('카스테라'), 천명관('고래') 등 2000년대 소설들이 등장한 게 이채롭다. 문학동네에서 나온 책만을 한정한 게 아쉽기는 하지만 세계문학전집 열풍 속에서 오랜만에 등장한 한국문학전집이 반갑다.

낱권이 아닌 전집(全集)을 갖는 건 애서가들의 로망이다. 순서를 맞춰 좌르르 꽂혀 있는 전집은 보고만 있어도 행복하다. 솔직히 지적 허영심을 채워주는 데도 그만이다. 전집의 매력 중 하나는 다음에 어떤 책이 나올까 하는 기대감. 한국문학전집 21번째 주인공은 누구일까.

/김미은 문화1부장 mekim@kwangju.co.kr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논설주간 申港樂 편집국장 奇賢鎬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우편번호 501-710)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편 집 부 2200-649 정 치 부 2200-612 〈대표 FAX 222-4918〉 사 회 부 2200-616 〈대표 FAX 222-4267〉 경 제 부 2200-663 문화 1부 2200-661 문화 2부 2200-651 여론매체부 2200-621 체 육 부 2200-697 사 진 부 2200-693 조 사 부 2200-571
경영지원본부 2200-515 〈F A X 222-8005〉 광고마케팅국 227-9600 〈F A X 227-9500〉 디 자 인 실 2200-536 프로젝트팀 2200-555 문 화 사 업 국 2200-541 〈F A X 222-0195〉 독자서비스국 2200-551 〈F A X 227-9500〉 서 울 지 사 02-773-9331 〈F A 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